

The Reunified Korea Economy

統一經濟

Briefs

- 남북한 청산결제제도의
운용 방안과 과제

Executive Summary

□ 남북한 청산결제제도의 운용 방안과 과제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합의한 이후 남북은 경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였다. 남북은 일반 결제방식이 아닌 청산결제의 방식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였고 **2003년 청산결제에 대한 합의서를 국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교환하였다. 합의서에는 청산결제의 주체, 방법, 청산결제 한도, 청산결제 은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남북은 청산결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3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현재 청산결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청산결제란 1국과 타국과의 무역대차를 결제할 경우 거래 때마다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액을 기장하여 두었다가 일정 기간(통상 1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정방식이다. 청산결제는 국가간 수출입 대상 품목과 수량, 결제방식을 결정하는 국가간 협정무역이며,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가 상호 연계되는 연계무역이며, 수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한 구상무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북간 청산결제제도가 도입되면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긍정적 효과로는 직접교역 비중 증가에 따르는 증개수수료 및 금융 비용 등의 거래 비용 감소,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공, 직접대금 결제제도의 구축, 개별 기업의 거래 안정성 제고, 남한 기업의 상업적 반출 증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또한, 북한 경제난 해결의 측면 지원과 남북간 정치·경제적 교류 협력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통한 남북한 통합을 위한 초석 마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로는 북측의 현금 선호 현상으로 청산 잔액이 장기 차관으로의 변질될 수 있고, 청산 잔액을 물품으로 정산 시에는 물품 결함에 대한 클레임 처리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북측이 경쟁력이 없는 재화만을 청산결제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무역기구의 현금 선호 현상으로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할 경우도 존재한다.

남북간 청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 간에 체결된 각종 합의 사항의 실천과 함께, 3통(통행·통신·통상) 등 유무형의 거래 비용 절감 장치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산결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간 교역 규모, 품목, 수량, 가격, 수송 방법 등에 대한 무역협정 및 무역의정서를 체결하고, 남한의 반출 증대 대책으로 반출도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반출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청산결제 도입에 따르는 직접 교역 비중 확대 대책 마련, 북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남북간 청산거래에 따르는 분쟁 예방 기구(가칭 '남북청산거래조정위원회') 설치 등도 필요하다.

1. 청산결제제도(cleaning system)의 의의 및 운용

- (청산결제의 의의) 청산결제는 수출과 수입의 잔액만을 결제하는 무역의 한 형태임
 - 청산결제란 1국과 타국과의 무역대차를 결제할 경우 거래 때마다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액을 기장하여 두었다가 일정 기간(통상 1년) 단위로 그 대차(貸借)의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정방식
 -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는 우선 양국 간 청산협정을 체결한 뒤 결제은행이 결정되면 양국 간의 교역 및 대금결제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의 청산구조를 통해 거래
 - 청산결제에 의한 교역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 제국가간의 무역확대 방안의 하나였으나 IMF의 금융질서 확립 후 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 결제수단으로 주로 활용
 - 동구권의 체제 전환, 구소련의 해체로 청산결제보다 환거래에 의존
 - 청산결제제도의 근본취지는 외화(hard currency)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교역 당사국간의 교역 균형을 유지
- (결제 절차) 청산결제방식은 협정 체결, 청산은행 지정, 결제통화와 물품 가격의 결정, 청산계정의 설치, 청산계정의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침
 - ① 양국 간 협정의 체결 (교역에 관한 기본 조약 체결 → 일정 주기(통상 5년)의 무역협정 체결 → 1년 주기의 무역의정서 체결)
 - 기본 조약 : 양국 간의 교역 관계의 일반적 목표와 호혜 관계를 명시
 - 무역협정 : 대략적인 교역 규모, 품목, 수량, 수송 등에 관한 합의 사항의 명시와 청산계정운용에 대한 기본 원칙 명시

- 무역의정서 : 당해 연도의 교역 규모, 상품의 세분류와 수량, 가격 등의 세부 내용 포함

② 청산결제은행의 지정

-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고, 청산결제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 자금 지원 및 결제창구의 일원화, IMF의 8조국 의무 준수, 고유 업무의 특성 및 지원 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정

③ 청산결제통화와 물품 가격의 결정

- 결제통화는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과 국제적 유동성을 지닌 통화(hard currency)로 결정하는 방법
- 무역의정서에 통상 물품 가격을 포함하나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은 무역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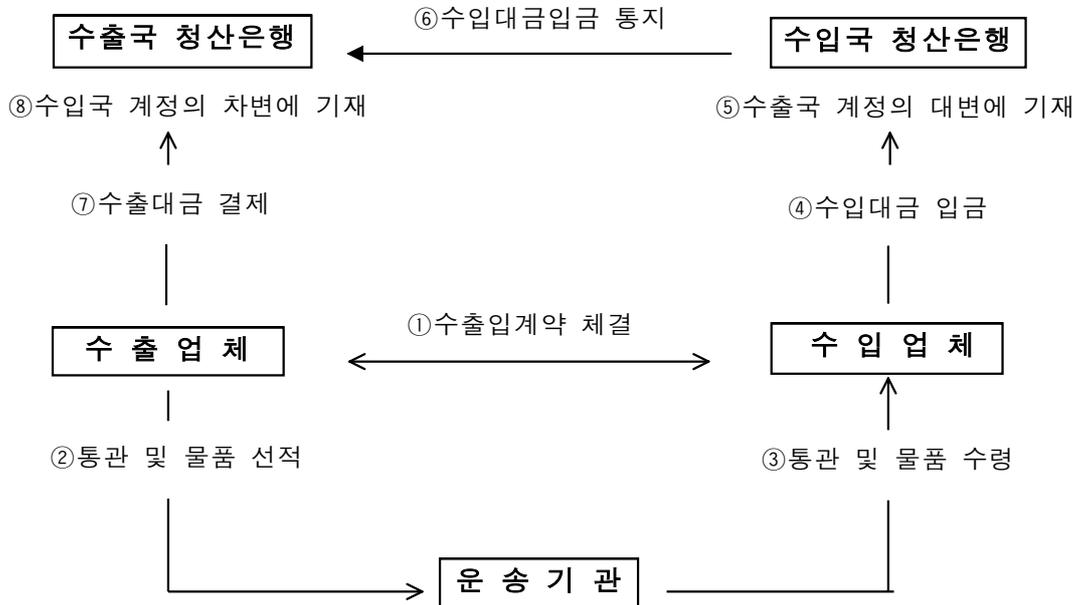
④ 청산계정의 설치

- 교역형태별로 설치하여 운용하며, 교역형태의 성격에 따라 물품계정, 용역계정,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

⑤ 청산계정의 결산

- 교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결제는 결제통화에 의한 방법과 상품의 추가 공급에 의한 방법으로 정산

<그림 1> 청산결제제도의 기본 개념도



자료: 강원진, 『무역결제론』, 박영사, 2004, p. 418.

- (청산제도의 특성) 청산결제에 의한 교역은 대응무역의 한 형태로, 국가간 협정무역과 관리무역, 연계무역, 구상무역의 특성을 지님
 - 국가간 협정무역 : 국가간 수출입 대상 품목, 수량, 결제방식을 결정
 - 국가에 의한 관리무역 : 국가가 수출입 규모와 신용한도를 관리
 - 연계무역 :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가 상호연계
 - 구상무역 :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으로 지급
 - 대응무역 : 교역 상대방의 대응구매의 직접 의무 부과로 교역이 매우 제한적임
 - 청산결제제도 : 국가간 수지균형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래 상품의 폭이 다양함

○ (청산결제 도입의 장점) 교역 대상 및 규모 확대, 정치적 긴장 완화 등

-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교역 대상을 다변화할 수 없는 국가에 유리
-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제품의 판매도 가능
- 당사국간 협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국제 무역 질서에 따르는 가격 통제를 피하고 상품 처분의 유리한 조건의 조성 가능
-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개척 능력의 어려움 완화
-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국가의 대외교역에 적합
- 정부가 무역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역 당사국간 정치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청산결제 도입의 문제점) 국제 교역 질서 위배 및 쓰레기통 효과에 따르는 교역 감소 우려

- 청산결제는 국가의 개입과 관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국제 교역 질서와 상반됨¹⁾
- 쌍무적 무역수지 균형의 적용이 교역 규모가 축소 균형화될 우려 존재
- 결제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쓰레기통 효과(Mulleimer-Effekt)의 문제²⁾가 발생하여 교역 규모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무역 불균형의 발생으로 잔액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차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존

1) IMF협정 제8조는 쌍무적 결제 협약을 제한하고 있다.

2) 전면적 청산제도의 도입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재화(hard goods)는 경화(hard currency) 확보에 활용되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재화(soft goods)만 협정 체결국간에 거래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는 오히려 협정 체결국간의 교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세한 것은 독일 사례를 분석한 김용구, 「남북한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경제 교류에서의 결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회담사무국, p. 12를 참조하시오.

2.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도입

- (도입 필요성) 남북간 청산결제제도는 북한의 외화난과 경제난 해결, 직접교역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 청산결제제의 도입은 교역 시 필요한 외환 사용량을 줄여줌으로써 북한의 외화난을 측면 지원하고 이는 북한 경제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청산 시에만 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교류의 확대에 기여
 - 청산제도를 통해서 무이자 초과 반입 신용(swing) 제공이 가능하며, 이것이 남북한 경제 교류를 쉽게 하고 그 확대에 기여
 - 남북간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으로 전환하여 거래 비용의 감소를 도모
 - 청산제도협정체결은 지속적인 남북간 경제적·정치적 협력 및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초석 마련
 - 북한은 중앙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대외경제 조종체계를 유지·발전하는 것이 가능
- (남북 청산결제제도 도입 경위) 남북은 2003년 8월 청산결제에 대한 합의를 채택하였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1984~85년의 '남북경제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제기 (기본: 청산결제, 필요시 다른 결제방식의 도입)
 - 1991년 12월 남북간 '기본합의서'의 채택
 - 1992년 8월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의 직교역과 청산결제 의 방식을 채택(제1조 8항 및 9항)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합의
 - 2000년 8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4개의 제도적 장치 마련(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에 합의
 - 2000년 11월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청산결제에 대해 가서명

- 2003년 6월 국회 동의
- 2003년 7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 2003년 7월 제2차 '남북경협 제도실무협의회'에서 청산결제은행 지정 (남한 : 수출입은행, 북한 : 조선무역은행)
- 2003년 8월 청산결제합의서 발효
- 2003~04년 청산결제실무협의를 3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구체적 진전사항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북한이 청산결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현재는 남북간 협의는 중단된 상태임

○ 주요 합의 내용³⁾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기업들 간에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
 - 당국이 정한 경제단체가 청산결제 거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호 통지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기간: 2004년 2/4분기의 합의되는 시기~12월 31일
- 청산결제 한도: 미화 3천만 달러 범위 내
- 신용 한도 : 청산결제 한도의 15%, 이자율 : 연 1%
- 청산결제 대상 품목 :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위탁가공 교역은 제외)
-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 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을 이용, 이외 은행업무 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 이용
- 2004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또는 미 달러화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청산하며 2004년 4/4분기 내에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 이행을 위한 2005

3) 통일부, 『주간 북한 동향 690호』, 2004.4.6, www.unikorea.go.kr/index.jsp

- 년도 합의서' 체결
- 남과 북은 합의되는 적절한 시기에 쌍방이 정한 장소에서 남북기업들이 이 합의서의 대상 품목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
 - 2004년도 청산결제 대상 품목을 문서 교환 방식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확정키로 함

3. 남북 청산결제제도의 도입 효과

- (긍정적 효과)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개별 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됨
- ① (기업에의 긍정적 효과) 거래 및 금융 비용의 감소, 거래 안정성의 확보, 교역 균형 유지를 위한 남한 반출 2억 달러 증가 등이 있음
- 직접교역 비중 증가에 따르는 거래 비용의 감소

<표 1> 남북간 교역 형태

교역 형태	직접교역	간접교역	직·간접의 혼합교역
업체수의 비율(%)	17.4	60.1	22.5

자료: 통일부·한국무역협회, 「남북 교역업체 설문 조사 결과」, 2003. 10. 6.
 주: 교역업체의 2/3이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으로 전환을 희망

- 직접교역 형태로 전환시 기대 효과
 - * 단기 효과: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낮춤
 - * 장기 효과: 거래 당사자간 장기적 신뢰 구축에 유리, 간접교역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의 절감,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공

-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으로의 반출 물자에 대해 즉시 대금이 회수됨으로써 반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증대되어 남북 교역이 활성화됨
- 남북간 직접 대금결제제도의 구축과 금융 비용 절감
 - 제3국 은행을 통한 송금으로 발생하는 외화 환전 및 송금 비용 절감
 - 송금환 및 현금 송금에 따르는 신용 위험과 정치적 위험이 상존

<표 2> 남북간 대금 결제 방식

결제방식	송금환	현금	신용장+현금	현금
업체수의 비율(%)	63.4	18.3	8.7	7.5

자료: 한국무역협회, 『'06년 남북교역 전망 및 애로조사』, p.8.

- 개별 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
 - 반입 기업: 장기간 교역을 통한 거래 관행 정착으로 안정적 상태 유지
 - 반출 기업: 대금 회수 곤란 등의 신용 위험에서 탈피하여 교역에 적극적 태도 견지
- 교역 균형 달성을 위해 남한 기업의 상업적 반출 증대가 기대

<표 3> 남북간 거래 유형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반 출	상업적거래	94	63	73	80	89	99
	비상업적거래	179	164	297	219	350	616
	소 계	273	227	370	299	439	715
반 입	상업적거래	152	172	270	436	257	320
	비상업적거래	-	1	1	1	1	20
	소 계	152	173	272	437	258	340
합 계		425	402	641	724	697	1,055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동향」 각 월호에 의거 작성

- 남북한 간의 교역수지는 남한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실질 교역수지는 북한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남한의 상업성 거래에 의한 북한 물품 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교역적자는 2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단기적으로 북한 물품의 반입이 3억 달러를 유지할 경우 교역 균형을 위해 남한의 반출이 약 2억 달러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북한 경제가 회복되면 북한이 남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실질 교역수지는 대폭의 흑자 달성이 예상됨. 장기적으로 북한이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여부에 따라 남북간 상업적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② (경제 전반에의 긍정적 효과)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 북한 경제난 해결, 남북 경제통합 기틀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

- 북한은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한도 범위 내에서 외화 없이도 남한의 물자를 반입 가공한 후 물자를 반출하여 대금 상환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 교류 활성화의 기대됨
- 남북간 실질 교역수지의 균형 달성 가능
- 남북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교역 확대로의 연결이 기대
- 남북간 교역확대로 북한 경제난 해결에 도움
- 남북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통한 경제통합 기틀의 마련
- 청산제도를 통해서 무이자 초과반입신용(swing) 제공이 가능하며 이것이 남북한 경제 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

○ (부정적 효과) 청산결제제도 도입이 교역 확대 장애, 쓰레기 효과, 청산 잔액의 장기 차관 전환 등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

- 청산결제는 양국간 교역 균형을 위해 거래나 신용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역 확대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 간의 교역수지는 남한이 흑자를 보이

고 있으나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실질 교역수지는 북한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남한의 반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교역수지의 균형을 위해 북한 제품의 반입은 감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음

- 남한의 반출이 1억 달러 미만을 유지할 경우 남북간 상업적 거래는 남한의 반입도 1억 달러로 감소해야하므로 상업성 교역 규모는 2억 달러 이하로 축소될 수 있음
- 북한이 경쟁력 있는 제품은 일반 결제방식으로 반출하고 경쟁력 없는 제품은 청산결제방식으로 반출할 경우 쓰레기통 효과의 문제 발생으로 남북 교역량이 감소 우려
- 청산결제와 경화결제를 병행하는 결제방식의 도입이 오히려 남북간 결제제도만 복잡해지고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문제점이 대두
- 북한의 무역기구가 청산결제를 회피하고 현금 선호 현상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무역기구로 하여금 청산결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무역 불균형의 발생으로 잔액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 차관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음
- 남북한이 상품 공급의 경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의무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
- 청산잔액을 물품으로 정산 시 물품 결함에 대한 클레임 처리가 곤란
- 북한의 반출 능력이 불안정하고 북한이 계획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합의를 어려움 없이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

4. 동서독 간 청산결제제도 적용 사례

○ (내독 교역의 제도와 경험) 동서독 간의 제도와 경험은 남북간 교역의 추진 방향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 (동서독의 입장) 내독 교역에 대해 서독은 정치적 목적에서, 동독은 경제적 목적에서 접근함

- 서독: 대동독 교류는 민족 이질성 극복 및 동독 경제의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의 편입 방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

- 동독: 생산재 및 고급 소비재의 공급 애로 해결 및 우수한 기술 이전을 위한 경제적 목적

○ 내독 교역의 기본 구조⁴⁾

- 반출입 상품은 사전 결정하여 고시제인 Positive List⁵⁾이며, 내용은 상호 합의로 변경 가능

- 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도 청산결제를 허용

- 대금결제는 동서독 간 청산계정을 이용하며 일정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상호 대월을 허용

4) 교역의 기본 구조는 베를린 협정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베를린협정은 프랑크푸르트협정을 승계하였다. 이 협정들은 국가로서의 동서독이 아니라 각 측이 사용하고 있던 통화 지역, 즉 독일마르크화(Deutsche Mark 또는 DM-West)를 사용하는 지역과 동독마르크화(Deutsche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또는 DM-Ost)를 사용하는 지역 간의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협정 체결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라 각각의 통화 지역이었다.

5)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공고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입이 허용되는 물품 품목만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 품목만을 표시하는 제도는 Negative List라 한다.

- 동서독간 명목상 화폐 단위인 청산단위(VE: Verrechnungseinheit)로 청산결제하며, 결제단위는 단지 기장 능력만 있고 상품 구매력은 전혀 없음
- 동서독간 가격 결정 방식은 서독의 국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함
- 동서독간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여 서독은 동독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부과

○ (청산계정의 운용) 동서독 간 청산계정은 하부계정, 특별계정, 봉쇄계정 등이 있음⁶⁾

- 서독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과 동독국가은행(Deutsche Staatsbank)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고 하부계정 (1), (2), (3)을 개설
- 하부계정 (1), (2)는 일반 상품의 반출입에 이용하고, 하부계정 (3)은 용역 거래에 이용
 - 이때 하부계정의 세분화는 각 계정별로 교역수지균형을 달성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전체 교역량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며, 수량 통제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상존
- 동독국가은행이 서독연방은행에 특별계정 개설: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지급하는 정부 차원의 각종 이전지출 취급이 목적
- 봉쇄계정의 개설: 비상업적 거래를 위한 결제 계정
- 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 계정의 개설

○ (상품의 분류 및 교역의 추진) 상품 고시 및 분류, 교역 규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둬

6) 고일동, 「남북한 청산결제제도의 운용 방안과 정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pp. 32~35.

- 상품 고시는 Positive List 방식
- 동종의 상품 군으로 분류하고 일반 인가 품목(자동 승인 품목)과 개별 인가 품목(제한 승인 품목)으로 분류
- 특정 품목에 한하여 수량 및 금액별 쿼터 한도 제한 가능
- 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덤핑 조사 등의 교역 규제 가능

○ (대월 제도 및 금융 지원) 대월 한도와 신용보증 등의 제도적 장치 구비

- 대월(Swing credit)의 상한액은 매 5년 간격으로 변경
 - 동독 측 반입액의 10%를 기준으로 대월액 결정
 - 대월 초과시 반출 중단
 - 연말 청산의 의무화
- 서독이 동독에 상업 신용 보증과 은행 신용 등을 공여

○ (교역 확대 조치) 동서독 간 교역확대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함

- 대동독 수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
- 내국간 거래에 의한 관세 면제

5. 남북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의 과제

○ (도입 시 고려 사항)

-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이 경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의 회생과 개혁·개방 유도
-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 구축

- 북한 경제의 중국 경제로의 편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단순한 교역 절차와 간단한 운용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 자율 기능 확대
- 민간의 교역은 상업적 원칙에 입각해서 운용

○ (일반 과제) 남북 청산결제제도 도입에 따르는 남북 간의 일반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남북간에 체결된 각종 합의 사항의 실천이 매우 중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4개의 경협 합의의 제도적 장치 등)
- 유무형의 거래 비용의 절감 장치의 보완
 - 3통(통행·통신·통상)의 실질적 보장
 - 직접 교역체제의 구축
- 2004년 합의된 남북간 청산결제에 대한 합의서의 이행이 선행

○ (정책 과제)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도입에 따르는 청산관련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남북간 교역 규모, 품목, 수량, 가격, 수송 방법 등에 대한 무역협정 및 무역의정서를 체결
- 북한이 실질 교역수지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산결제에 대한 매력력이 없기 때문에 남한의 반출 증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
 - 남북협력기금의 손실 보조의 적용범위 확대: 경제협력 → 반출 및 경제협력으로 확대
 - 반출에 따르는 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험 상품 개발
 - 북한의 대화 창구인 민족경제연합회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한시

적 단일 창구를 개설하여 초기의 탐색 비용을 절감

- 청산결제는 직접 교역 비중의 확대가 예상되며 남북간 직접교역에 따르는 대책 수립이 필요
 - 제도적 장치: 직거래 대상 품목과 범위, 원산지 확인, 분쟁 조정 장치 등
 -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의 이중 용도 품목의 관리 및 예방 교육
 - 케치올 통제(Catch-all controls)제도⁷⁾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
- 북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 플랜의 수립
- 남북청산거래조정위원회(가칭)의 설치

<표 4> 남북청산거래조정위원회(가칭)

임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의 수지 균형 - 교역 품목의 조정 및 가격 결정 - 남북간 상품 공급 계획의 조정
조정주기	- 월 2회
구 성	- 통일부 산하의 상설기구(개성의 남북경협사무소를 활용)

- 청산결제제도 도입이 기존 거래 관행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

조영기 현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878-1702)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bellkey@hanafos.com)

7) 케치올 통제는 수출 품목이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및 생산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는 제도로 사실상 거의 전 공산품이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 남북 경험 추이 >

		단위	2003	2004	2005	2006. 1~2
상업적 거래	남북 교역	만 달러	40,868	34,780	41,951	7,085
	- 일반 교역	(%)	(19.2)	(-14.9)	(20.7)	(17.0)
	- 위탁가공교역		22,367	17,179	20,978	3,032
	경제협력사업		18,501	17,601	20,973	4,053
거래	개성공단	만 달러	2,103	8,867	27,003	3,853
	- 개성공단	(%)	(-15.8)	(321.6)	(202.6)	(65.6)
	- 금강산관광		0	4,116	17,674	2,801
소 계	만 달러	1,602	4,177	8,707	849	
	(%)					
소 계		만 달러	42,971	43,647	68,954	10,937
	(%)		(16.8)	(1.6)	(57.9)	(30.5)
비상업적 거래	대북 지원	만 달러	27,065	25,840	36,504	1,893
	기 타	(%)	(27.0)	(-4.5)	(41.2)	(55.8)
소 계	만 달러	2,377	215	117	129	
	(%)					
소 계		만 달러	29,442	26,055	36,621	2,022
	(%)		(7.5)	(-11.5)	(51.6)	(59.9)
총 계		만 달러	72,413	69,701	105,575	12,959
	(%)		(12.8)	(-3.7)	(51.4)	(34.4)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 >

		단위	2000	2004		비교
			북한	북한(A)	남한(B)	B/A(배)
인 구		천 명	22,175	22,709	48,082	2.1
경제성장률		%	1.3	2.2	4.6	-
명목 GNI		억 달러	168	208	6,810	32.8
1인당 GNI		달러	757	914	14,162	15.5
무역	무역 총액	억 달러	19.7	28.6	4,783.0	167.2
	- 수출		5.6	10.2	2,538.4	248.9
	- 수입		14.1	18.4	2,244.6	122.0
에너지	발전용량	만 kW	755	777	5,996	7.7
	발전량	억 kWh	194	206	3,421	16.6
	원유도입량	만 배럴	285	390	82,579	211.7
생산량	쌀	만 톤	142.4	180.0	500.0	2.8
	철광석	만 톤	379.3	457.9	22.6	0.05
	자동차	만 대	0.7	0.45	346.9	770.9
	비료	만 톤	53.9	43.4	361.4	8.3
S O C	철도 총연장	km	5,214	5,235	3,380	0.6
	도로 총연장	km	23,633	25,185	100,278	4.0
	항만 하역	만 톤	3,550	3,690	53,278	14.4